

# “지방소비세 16%, 지방교부세 21%로 올려 달라”

## 전국시도지사협,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등 8대 과제 해결 촉구

전국 광역시장과 도지사들이 지방소비세 확대,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 기초연금 지방재정부담 경감,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 소방재정 확충, 지역발전 특별회계 합리적 개편, 중앙-지방 재정부담 협의제도 마련 등 도·시·도지사들의 지방재정현안 8대 과제 해결을 위한 성명서에 포함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27일 충북 C&V센터에서

제30차 전국시도지사총회를 개최하고 이들 8대 과제를 국회와 정부가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 등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정책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난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 구현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소비세 확대의 경우 지방세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반영되는 체계 구축

을 위해 OECD 평균인 40%까지 확대돼야 하고, 우선적으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16%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6년 19.24%로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저출산·고령화 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보장을 위해 21%로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고보조사업 구조조정에는 중앙정부가 지방재정을 국가 정책목적으로 활용하는 국고보조

사업을 지방정부 재정난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하면서 국고보조사업은 재정책임성도 저하시키므로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사무구분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축소, 유사·중복 사업 통·폐합, 포괄보조 확대 등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연금제도가 대표적인 국가사무이므로 중앙정부가 재정을 100%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을 제시하고, 다만 중앙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해 현행 지방재정 부담규모 수준의 분담방안을 제시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분리 국감 무산

### 상시국감 도입 필요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립으로 올해 처음 시행기로 한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자 국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27일 오후 국회의 원화관에서 열린 ‘첫 분리국감 불발사태...국정감사 이래로 관철은가’ 토론회에서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시국감을 도입하거나 국감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정책적 통제라는 국감의 특성은 유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수행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주기 위해 정기국감과 상시국감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또 상시국감을 도입하지 않는다면 예산안 논의가 집중되는 하반기 국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세월호 정국 등 변수에 국감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국감 시기를 상반기 임시회 기간으로 앞당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현출 국회의원보좌처 정치행정조사사의 권도 “행정부에 대한 정기적 통제 절차로서 국감의 기능은 유지하되 임시회 기간 위원회별로 일정 기간 수시로 국감을 시행토록 해야 한다”며 비슷한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정기국감은 주요 국가기관, 상시국감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그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격년제 국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지방교육 재정 확충 요청

### 장항국 시도교육감협회장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7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을 맡은 장항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간담회에서 “특별교섭 확대, 누리교육 도입, 고교 무상교육 등 국민적 요구에 부응할 교육 예산 확충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장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등 정부가 국가 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도에 이양하면서 시·도 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돼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 개정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노조화에 따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과 관련해 “장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미복귀자 후속조치는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겨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황우여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생각을 갖고 있더라도 구존동이(共存同興,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같은 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뜻)의 정신으로 하나를 지향해야 한다”며 “교육을 정치적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으로 보장하자”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27일 오후 충북 청주시 오송 CV센터에서 열린 제30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협의회장인 이시중 충북도지사와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는 지자체장들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 지방정가

### “광주시 재난상황실 근무 영망”

이정현(새정치·광산 1) 광주시 의원은 27일 광주시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을 어기고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 재난종합상황실 설치·운영 규정에 따르면 3인 1조 3교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평일 낮에는 2명, 휴일과 야간에는 각 1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재난 안전 상황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에 부산과 경남지역에 폭우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데 만약에 광주에서 야간에 재난상황이 발생했다면 재난상황실 근무자 1명이 공무원 비상소집, 사고발생 현황 유관기관 통보 등을 제대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정부합동감사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은 1인 1조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하다 규정 불이행 지적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 市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 시급

문태환(새정치·광산 2) 광주시 의원은 27일 “광주시청소년수련원 운영비 지원이 전국 광역시도 중 최하위 수준”이라며 “예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는 재단법인 살레시오수녀회에 위탁해 운영하는 광주청소년수련원에 연간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부산(8억원), 대구(5억5500만원), 대전(4억8500만원), 경기(3억6000만원) 등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10~20%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타시도는 해외캠프, 평생교육, 인터넷방송국 등 다양한 수련체형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광주는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최소한 타시도의 50% 수준까지는 내년부터라도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도의회, 장애인 애로사항 청취

전남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강성휘)는 27일 도의회 2층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내 장애인 단체 대표자 15명과 도의원 및 관계자 등 총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가 주최하고 박철홍 의원(새정치 비례)이 주관해 장애인들의 애로사항과 주요현안, 제안사항 등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전남도의회 차원에서 지원 및 해결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성휘 위원장은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 장애인 현장 목소리가 예산과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각 장애인단체 대표들은 사무실 운영비 지원 등 기본적인 애로사항부터 시군 수화통역센터 설립 및 장애인 자립센터 훈련비 지원, 사람의 끈 연결운동 개최, 여성 장애인 흡혈과 사업, 장애인 시설 활성화 방안과 권리 보장 등을 당면과제로 제시했다.

### 통진당 시당 500명 동조 단식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은 27일부터 당원 500명이 참여하는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시당은 광주 동구 금남로 1가 알라딘 서점앞에 있는 세월호 대책위 전막을 거점으로 단식농성, 전만인 서명운동, 대시민선전전, 촛불집회 등을 가질 예정이다.

시당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한 수사권, 기소권 포함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통합진보당 지도부를 포함한 당원 5000여명이 전국적으로 동조 단식에 들어간다”면서 “광주시당도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광주시민의 염원을 모아낼 것이다”고 밝혔다.

/최원익기자 cki@kwangju.co.kr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24면 발행·호말최대부수**  
광주일보 ☎ 062-222-8111

##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 맑은 피부과·성형외과

•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레이저 시술 전문클리닉  
• 피부과 전문의 진료

레이저센터 (최신 30여종)

항노화치료

기미클리닉

성형외과

지방이식 흡입

모발이식 관리

에스텍

맑고 깨끗한 피부제안 For your best skin

- 최신레이저 30여종 보유

- ① 리프팅레이저: 볼레라, 써미지, 웨너트 복합치료
- ② 피드백 레이저: 스쿠스빔, 아이솔, 브이빔, 프락셀
- ③ 체온 조절 레이저: 헤파맥스, 디오오우즈메
- ④ 피부 미백: 쉐메나스틴 엑셀V, 쉐메나스 루비레이저
- ⑤ 주름·흉터: 프락셀 듀얼, 울트라맥스싱크로, 프랙토라 인트라셀, 프락셀 세나
- ⑥ 모공: 엔티지, 프락셀5중
- ⑦ 비인: 네오모트라, 지방흡입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아비엔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www.clear-skin.co.kr | www.s-theitic.co.kr

[문암점] 문희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

[주소지] 상무점: 상무지구 미즈아비엔B/D 1F | Tel: 385-7575, 1177 | 에스텍: 385-0009

[문암점] 문희예술회관 건너편 3F | Tel: 528-1415 | 무료전화: 080-707-7575 | 에스텍: 525-7555